

타부처와의 벽찬 싸움에서 밀리는 환경처 環境處위상 재정립은 요원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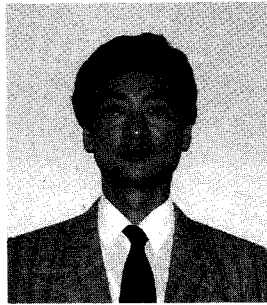
폐놀 을 무단방류해 30일 간조업정지처분을 당한 斗山전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집행정지를 싸고 경제기획원 상공부등과의 신경전 끝에 환경처는 지난 4월 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斗山전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업재개의 길을 터주었다.

환경보전측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엄벌해야한다는 환경처의 환경논리가 수출보국을 앞세운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리는 순간이었다.

이로부터 2주일이 지난 4월 22일 斗山전자는 또다시 폐놀 원액 1.5톤을 유출, 洛東江을 오염시켜 환경처는 장·차관이 갈리는 비운을 맞았다.

또 지난 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환경처가 안전을 올린 항공기소음환경기준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최근들어 위험수위에 달한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환경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는 환경처의 입장이 보상을 위한 집단민원을 염려한 경제기획원과 교통부 등에 밀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姜眞淳
(한국일보·사회부기자)

이 두사건은 환경처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선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일화이다.

환경처는 업무추진에 있어 타부처와의 연관성이 전부 어느 부처보다도 높다.

예를들어 수질관리의 경우 하수종말 처리장건설은 건설부가, 공단지역외의 폐수배출 단속은 시·도가, 음용수질의 기준은 보사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일일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고황유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동자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자동차매연단속을 강화하려면 교통부, 상공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정부공공기관의 공사에 잘봐달라는 압력성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중 막내격인 환경처는 이 부처에 밀리고 저 부처의 반대 등의 이유로 업무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퇴임한 許南薰전환경처장관은 이임사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직원들이 일요일도 잇은 채 열심히 뛰었지만 환경행정은 워낙 여러부처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그동안의 심경을 일부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처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6백35억원에 추경 2백67억원을 포함, 9백2억원으로 정부전체예산의 0.32%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예산(7백27억원)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환경관련투자도 GNP대비 0.15%로 미국 0.56% 영국 0.74% 스웨덴 1.69% 스위스 1.03%와 대조를 이루고있다.

이처럼 힘도없고 예산도 적은 환경처는 업무특성상 다른 부처와 대립적인 입장에서 벽찬 싸움을 하고 있다.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동자부 등의 개발부서와 환경보전을 해야 하는 환경처의 입장이 각종개발사업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한편 국민들은 환경행정의 모든 일을 환경처의 소관이라고 인식,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환경처에 묻고 있어 환경처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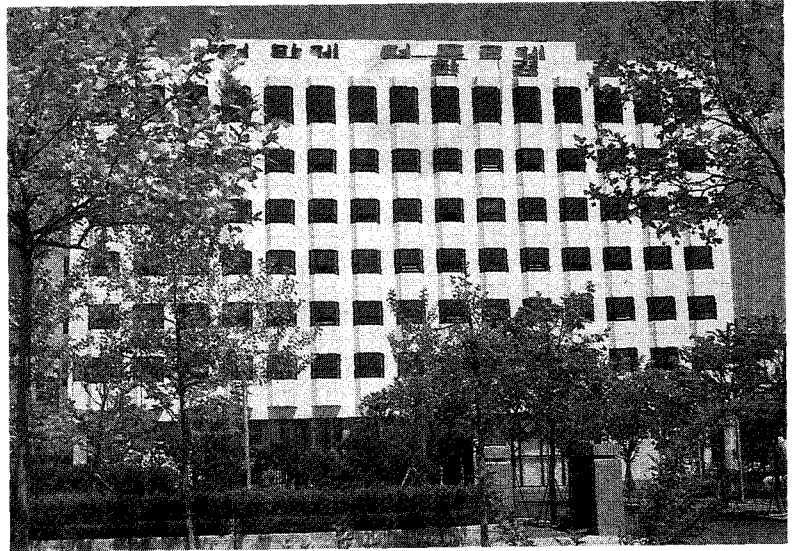
환경처내의 사람들은 『환경행정은 하다 보면 부처간의 마찰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해도 다른 부처처럼 각광은 커녕 비난만 받는것 같다』며 자조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난맥상을 보이는 환경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환경처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업화 이래 지난 30년동안 어질러는 환경을 현재의 환경처 힘만으로 정화하기란 역부족이란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행정은 환경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斗山전자의 폐놀오염과동을 겪은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다.

적어도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환경처의 협의사항이나 방침이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수용돼야 하며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 설계시정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처는 실효성있는 장기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일관성있게 추진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와함께 환경관련예산의 증액 등 재정적 뒷바침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의 환경청은 환경보전측면에 관한한 타부처에 우위의 입장을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 수상지명전에서 사퇴한 헤슬타인이 환경청 장관으로 부임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은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0년대말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안이 적극검토 됐으나 일부 유력인사들의 반대로 90년 1월 환경처 승격에 그쳐 환경전문가들은 아직도 아쉬움을 갖고있다.

平民黨(현新民黨)도 환경처의 환경부 승격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權彝赫환경처장관도 『환경



주어진 여건에서
직원들이 일요일도
잇은채 열심히
뛰었지만 환경행정은
워낙 여러부처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환경처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앞으로 환경처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힐 정도로 환경처위상의 상향조정이 필수적이다.

갈수록 높아지고있는 국민들의 환경욕구에 부합하기위해 환경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질것인가가 주목된다. ◻